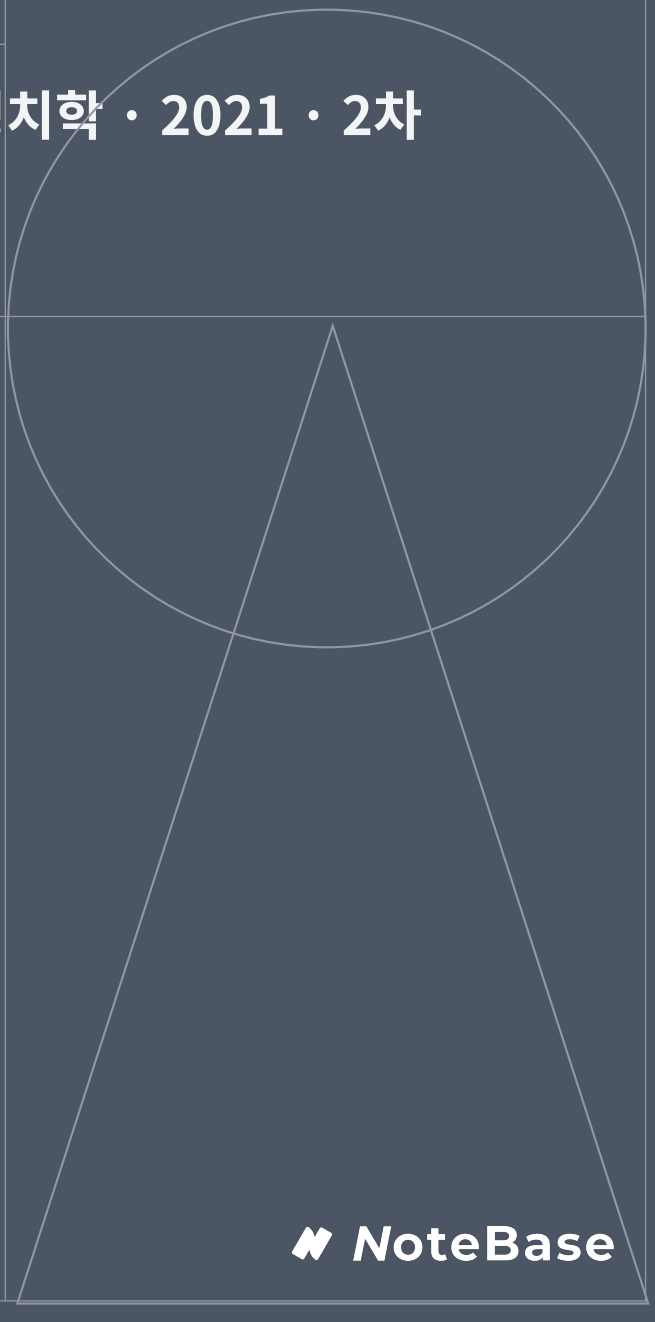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1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1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1 · 2차

문 1. 「공공외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법」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④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4번

쟁점

「공공외교법」의 목적(제1조)과 기본원칙(제3조)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공공외교 활동의 대상 범위에 관한 기본원칙, 즉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뒤집어 놓은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풀이

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기본원칙: 법률이 그 제도의 운영 방향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공공외교법에서는 제3조에 열거되어 있다.

핵심 구분

편중 금지 원칙 vs 대상 한정: 공공외교법 제3조는 공공외교 활동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대상을 넓게 열어 두는 원칙이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제1조) vs 기본원칙(제3조):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은 목적 조항의 내용이고, 보편적 가치 반영·지속가능한 우호협력·편중 금지 등은 기본원칙 조항의 내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외교법 제3조 기본원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다.
② O —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3조 기본원칙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과 부합하므로 옳다.
③ O — 「공공외교법」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1조 목적 조항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3조 기본원칙이다.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은 대상을 특정 지역·국가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편중 금지 원칙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틀린 표현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 올바른 표현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이라는 표현이 그럴듯하게 들려 정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법문은 오히려 편중을 금지하여 대상을 넓게 열어 둔다. '~을 대상으로 한다'처럼 범위를 좁히는 서술이 나오면 편중 금지 원칙과 충돌하는지 먼저 의심한다. 또한 ③을 목적이 아니라 기본원칙으로 오해해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외교법 문항에서 활동 대상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한다(폭넓은 대상)'가 원칙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정 지역·국가·이익으로 대상을 좁히는 서술은 오답으로 본다. 나머지 선지는 보편적 가치 반영,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국가이미지·위상 제고라는 세 축이 반복 출제되므로 이 셋은 옳은 진술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외교법 기본원칙 3종 세트: 보편적 가치와 고유 특성의 조화,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 특정 지역·국가 편중 금지. 목적은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 '편중 금지'만 확실히 잡으면 대상 한정형 선지를 바로 걸러낸다.

NoteBase

문 2. 현실주의 이론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② 국가는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라는 특성으로 인해 권력과 안보를 추구하게 된다.

③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이다.

④ 국가는 냉철한 손익계산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하는 행위자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현실주의(Realism) 국제정치이론이 전제로 삼는 기본 가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가를 하나의 통일된 의사결정 단위로 취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문항은 그러한 국가관과 어긋나는 진술을 골라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가중심성으로 국가는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행위자이다. 둘째, 단일 행위자성(unitary actor)으로 국가는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개인, 집단으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의지를 가진 단일체로 행동한다. 셋째, 무정부성으로 국제사회에는 국가 위의 중앙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스스로 힘과 안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넷째, 합리적 행위자성으로 국가는 손익을 냉철히 계산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와 대비되는 관점은 자유주의·다원주의로, 국가를 여러 이익집단과 개인의 합으로 보아 국가 내부의 다양성과 분절성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 O. 현실주의의 국가중심성 가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이다.

② 국가는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라는 특성으로 인해 권력과 안보를 추구하게 된다. → O. 현실주의의 무정부성 가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권력·안보 추구 논리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③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이다. → X. 이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다원주의적 국가관에 해당한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쪼개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의지로 행동하는 단일 행위자(unitary actor)로 가정한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다양한 조직과 개인·집단의 합' → '내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하나의 의지로 행동하는 단일 행위자'.

④ 국가는 냉철한 손익계산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하는 행위자이다. → O. 현실주의의 합리적 행위자 가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가를 '여러 조직·개인·집단의 합'으로 보는 서술이 나오면 이는 국가 내부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다원주의 시각이지 현실주의 가정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주의는 오히려 국가 내부의 다양성을 사상(捨象)하고 국가를 하나의 블랙박스, 즉 단일 행위자로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국가=가장 중요한 행위자', '무정부성→권력·안보 추구', '합리적 손익계산에 따른 이익 극대화'가 나오면 현실주의 가정과 일치하는 옳은 진술로 판단한다. 반대로 '국가는 여러 이해집단·개인의 합', '국가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을 좌우한다'는 식의 서술이 나오면 이는 현실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다원주의 가정이므로 '현실주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정답 후보로 우선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 4대 가정: 국가중심성(가장 중요한 행위자), 단일 행위자성(내부로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의지), 무정부성(권력·안보 추구의 근원), 합리적 행위자성(손익계산에 따른 이익 극대화). 이 중 '국가를 여러 조직·개인의 합으로 보는 것'만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다원주의 가정임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3.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 시각인 중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의 추구와 권력의 추구라는 국가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잘 설명한다.
ㄴ. 부의 축적과 효율보다는 국내외적인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ㄷ. 국가 간 경제관계를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관계로 가정한다.
ㄹ.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단일한 선호와 이익을 가지고 행위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정치경제학(IPE)의 세 주요 시각(중상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중 중상주의의 핵심 전제를 다른 시각과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상주의는 국가를 경제활동의 중심 행위자로 보고, 부(wealth)의 축적을 곧 권력(power) 강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국가중심적·현실주의적 시각이다.

핵심 개념

중상주의는 부와 권력이 상호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부가 곧 권력의 기초가 되고, 권력이 다시 부의 축적을 뒷받침한다). 국가 간 경제관계는 한쪽의 이득이 곧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zero-sum) 내지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 게임으로 가정하며, 국가는 대내적으로 분열된 이익집단들의 집합이 아니라 국익을 추구하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취급된다. 이는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불평등·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종속이론) 시각이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보는 포지티브섬 관계를 가정하는 자유주의 시각과 뚜렷이 구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옳다 → 중상주의는 부의 추구와 권력의 추구가 서로 분리된 목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가전략이라고 설명하는 시각의 대표적 특징이다. 부국(富國)이 곧 강병(强兵)의 토대가 된다는 논리가 이에 해당한다.
ㄴ. 틀리다 → 부의 축적과 효율보다 국내외적 불균등·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종속이론) 시각의 특징이다. 중상주의는 오히려 국부의 축적(효율적 생산과 무역수지 흑자)과 국가 권력의 강화 자체를 핵심 관심사로 삼는다.
ㄷ. 틀리다 → 중상주의는 국가 간 경제관계를 포지티브섬이 아니라 제로섬 내지 상대적 이득의 관계로 가정한다. 포지티브섬 가정은 자유주의(상호이익적 자유무역론) 시각의 특징이다.
ㄹ. 옳다 → 중상주의는 국가를 국내 이익집단들의 갈등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단일한 선호와 이익을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된 행위자(unitary actor)로 전제한다.

오답 포인트

ㄴ과 ㄷ은 언뜻 중상주의와 관련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시각의 특징이다. ㄴ의 '국내외적 불균등'에 대한 초점은 구조주의, ㄷ의 '포지티브섬' 가정은 자유주의의 핵심 전제이므로 중상주의로 착각하지 않도록 세 시각의 대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상주의 관련 지문이 나오면 우선 '부=권력' 연계, '제로섬/상대적 이득', '국가=단일 행위자'라는 세 키워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반대로 '포지티브섬', '상호이익', '자유무역'이 나오면 자유주의, '불평등', '착취', '종속', '분배'가 나오면 구조주의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중상주의=부와 권력의 유기적 연계 + 제로섬(상대적 이득) + 국가는 단일 행위자.
자유주의=포지티브섬(상호이익). 구조주의=불평등·분배 문제 초점. 이 세 축으로 선지를 구분해 접근한다.

NoteBase

문 4. 지역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초국가적 집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ㄴ. 정치적 기구의 설립이 경제통합보다 우선해야 한다.
ㄷ.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지면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ㄹ. 한 분야에서의 통합이 다른 분야로 파급,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역통합 이론 중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핵심 주장을 연방주의·정부간주의 등 다른 접근과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ㄱ~ㄹ 네 개의 진술 가운데 신기능주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야 한다.

핵심 개념

신기능주의는 하스(Ernst Haas) 등이 정립한 이론으로, 특정 기능 분야(주로 경제)에서 이루어진 통합이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인접 분야로 저절로 번져 나간다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핵심 기제로 본다. 통합의 추동 주체로 국가 엘리트만이 아니라 이익집단, 기술관료, 초국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정부간주의와 달리 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반면 연방주의는 정치적 통합 기구를 먼저 만들어 위로부터 통합을 이끄는 방식을 강조하므로,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저절로 번진다고 보는 신기능주의와는 통합의 순서와 동력에서 대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옳다. 신기능주의는 국가만이 아니라 이익집단·기술관료·초국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다원주의적 시각을 취하며, 그 중에서도 초국가적 집단(supranational actor)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ㄴ. 틀렸다 → 정치적 기구의 설립이 경제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연방주의적 접근에 가깝다. 신기능주의는 반대로 경제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정치통합의 필요성이 뒤따라 생긴다고 본다.
ㄷ. 틀렸다 →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지면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설명은 신기능주의의 파급효과와 정반대이다. 신기능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어질수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오히려 커진다고 본다.
ㄹ. 옳다. 한 분야에서의 통합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어 나간다는 것이 바로 신기능주의의 핵심 개념인 파급효과(spillover)이며, 이 문항이 묻는 신기능주의 설명의 대표적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ㄴ과 ㄷ은 모두 신기능주의와 반대되는 방향의 설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ㄴ은 통합의 순서를 정치가 경제에 앞선다고 뒤집어 놓았고, ㄷ은 파급효과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경제통합이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을 없앤다고 서술했다. 두 진술 모두 신기능주의가 아니라 연방주의나 국가 중심적 시각에 가까운 서술이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통합 이론 문제에서는 먼저 '통합의 동력이 무엇인가'와 '통합의 순서가 어떠한가' 두 가지 축으로 진술을 분류한다. 신기능주의는 경제→정치의 순서와 파급효과, 다원적 행위자(이익집단·초국가기구)를 강조하는 반면, 연방주의는 정치기구 설립이 먼저라는 하향식 접근을, 정부간주의·현실주의는 국가가 주도권을 쥔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진술이 이 중 어느 이론의 특징인지 대응시켜 보면 신속하게 정오를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기능주의 = 파급효과(spillover) + 다원주의적 행위자(초국가기구·이익집단) + 경제통합이 먼저. 연방주의 = 정치기구 설립이 먼저. 이 대비 구도만 기억해 두면 통합이론 선지 판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5. 권력 자원으로서의 국제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이(Nye)는 소프트 파워를 군사적 강압이나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의지를 따르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② 소프트 파워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③ 사이드(Said)는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④ 문화제국주의 이론은 권력 자원으로서의 문화가 서구 사회의 비서구 사회에 대한 지배와 헤게모니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권력 자원으로서의 국제문화라는 주제 아래 나이(Nye)의 소프트 파워 개념, 사이드(Said)의 오리엔탈리즘, 문화제국주의 이론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의 편견을 해소하는 개념인지 강화·정당화하는 개념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소프트 파워=군사적 강압(하드 파워)이나 경제적 유인 없이 매력과 설득으로 상대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힘. 오리엔탈리즘(사이드)=서양이 동양을 미개하고 열등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만들어 낸 담론으로,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비판된다.
문화제국주의=강대국(서구)의 문화가 약소국(비서구)에 일방적으로 확산되어 지배와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도구가 된다고 보는 비판 이론.

선지별 해설

① O — 나이의 소프트 파워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군사적 강압이나 경제적 유인 대신, 매력을 통해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설명은 나이가 제시한 개념 그대로이다.
② O — 소프트 파워는 군사·경제력 같은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문화적·규범적 영향력을 통해 상대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설명으로,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③ X — 틀린 표현: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 올바른 표현: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서양이 동양을 열등하고 이질적인 대상으로 왜곡하여 지배를 정당화한 담론으로 보았으며, 이는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 내고 고착시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④ O — 문화제국주의 이론은 문화가 권력 자원으로 작동하여 서구가 비서구를 지배하고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문화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편견 해소'처럼 긍정적·중립적 개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중심의 왜곡된 동양관을 만들어 내고 정당화한 담론이라는 비판적 개념이므로, '해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 것임을 바로 포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사이드나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하면 우선 그 개념이 서양의 편견을 강화·정당화하는 쪽인지, 해소·완화하는 쪽인지부터 확인한다. 사이드의 논지는 항상 전자(강화·정당화)이므로, 후자로 서술된 선지는 옳지 않은 설명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나이=소프트 파워(매력으로 자발적 순응 유도), 사이드=오리엔탈리즘(서양이 동양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정당화), 문화제국주의=서구 문화를 통한 비서구 지배·헤게모니 도구로 3가지 개념을 짝지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6. 동맹이론 중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루란 중립국이 중립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④ 동맹 상대국에 대해 강한 지원 의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자국이 방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동맹의 안보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 이론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개념 및 두 위험 간의 관계, 그리고 동맹에 대한 태도가 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방기란 동맹 상대국이 동맹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맹을 이탈·파기하여 자국이 홀로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연루란 동맹 상대국이 자국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자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을 일으켰을 때, 동맹 공약 때문에 그 분쟁에 함께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두 위험은 서로 상충(trade-off) 관계에 있다: 방기를 피하려고 동맹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하게 보일수록 연루의 위험은 커지고, 반대로 연루를 피하려고 거리를 두면 방기의 위험이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연루는 중립국이 중립 유지에 실패해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아니라, 동맹국이 일으킨 분쟁에 동맹 공약 때문에 자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중립 유지 실패는 동맹 관계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연루 개념과 다르다.
② X: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은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상충) 관계에 있다. 방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원 의도를 강하게 보이면 연루 위험이 높아지고, 연루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원 의도를 약화시키면 방기 위험이 높아진다.
③ X: 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국가일수록 오히려 방기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연루의 위험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동맹 상대국에 대한 지원 의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커진다.
④ O: 동맹 상대국에 대해 강한 지원 의도를 보이는 국가는 동맹 상대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기 시에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므로, 방기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 동맹 상대국의 분쟁에 끌려 들어가는 연루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상충 관계가 함께 성립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연루와 방기를 각각 별개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 위 양 끝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원 의도의 강도를 낮추면 방기 위험이 커지고 연루 위험은 작아지며, 지원 의도의 강도를 높이면 그 반대가 된다는 상충 관계를 비례 관계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연루를 '중립국의 전쟁 휘말림'으로, 방기를 단순한 '동맹 이탈'로만 좁게 암기하면 선지의 미묘한 표현 차이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비례'라는 표현이 나오면 연루-방기 관계는 상충(반비례) 관계라는 점을 먼저 떠올려 오답으로 판단한다. '지원 의도가 강한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방기 위험은 감소, 연루 위험은 증가라는 두 방향을 함께 점검한 뒤 선지가 어느 쪽을 묻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방기=버림받음(동맹 파기·미이행), 연루=끌려들어감(동맹국 분쟁에 연쇄 개입). 지원 의도 강함 → 방기↓ 연루↑ / 지원 의도 약함 → 방기↑ 연루↓, 즉 두 위험은 상충 관계임을 기억한다.

NoteBase

문 7. 국제정치이론가 콕스(Cox)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지식과 이론은 가치 중립적이며 객관적이고 시간 초월적이다.

②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대항 헤게모니(counter-hegemony) 운동을 야기한다.

③ 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강제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질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신현실주의는 현존 질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정당화하는 문제해결이론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로버트 콕스(Robert Cox)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 실증주의·전통적 국제정치이론(그가 '문제해결이론'이라 부른 것)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콕스는 '이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다(theory is always for someone and for some purpose)'라는 명제로 유명하며, 이는 이론이 가치 중립적이거나 시간을 초월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의 핵심이다.

핵심 정리

콕스는 국제정치이론을 두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문제해결이론(problem-solving theory)'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와 질서를 주어진 틀로 받아들이고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스스로는 몰가치적·객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현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콕스는 신현실주의(neorealism)를 이러한 문제해결이론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한다. 다른 하나는 콕스 자신이 지향하는 '비판이론(critical theory)'으로, 이론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그것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를 성찰하며, 기존 질서 자체를 변화의 대상으로 본다. 또한 콕스는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 개념을 세계질서 분석에 접목하여, 패권은 물리적 강제력뿐 아니라 피지배집단의 동의(consent)에 의해 유지되며,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경제위기가 대항 헤게모니 운동을 촉발한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콕스는 지식과 이론이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시간을 초월한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모든 이론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즉 특정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만들어지며 누군가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는 콕스가 비판하는 '문제해결이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 내세우는 주장이지, 콕스 본인의 주장이 아니다.
② O. 콕스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내재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주기적 경제위기가 기존 패권질서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켜 대항 헤게모니 운동을 낳는다고 설명한다.
③ O. 콕스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원용하여, 패권국의 지배가 단순한 강제력이 아니라 피지배집단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동의에 기초한다고 본다.
④ O. 콕스는 신현실주의를 현존 권력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 틀 안에서만 문제를 다루는 '문제해결이론'으로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오답 포인트

①을 콕스의 주장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이 문장이 실증주의적·전통적 이론관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어 일견 '학문적으로 온당한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콕스의 문제의식은 정확히 이 지점, 즉 이론의 몰가치성·객관성·초시간성이라는 전제 자체를 비판하는 데 있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콕스의 그람시적 세계질서론(헤게모니, 동의, 대항 헤게모니, 문제해결이론 비판)의 핵심 요소이므로 콕스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콕스 관련 문항은 '이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명제와 문제해결이론 대 비판이론의 대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에 '가치 중립적', '객관적', '시간 초월적' 같은 표현이 이론 일반에 대한 긍정으로 등장하면 콕스의 주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헤게모니·동의·대항 헤게모니·자본주의 모순 같은 그람시적 개념이 등장하면 콕스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콕스: 이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누군가를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이론) / 문제해결이론=기존 질서 정당화(신현실주의 포함) / 비판이론=콕스 자신의 입장, 질서의 기원과 변화 가능성에 주목 / 그람시적 헤게모니=강제력이 아닌 동의에 기초, 자본주의 모순→경제위기→대항 헤게모니 운동.

NoteBase

문 8. 중견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의 시각에서는 인구, 경제력, 군사력에 따른 외교적 기능과 행태에 따라 중견국을 구분한다.

② 오건스키(Organski)는 중견국을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제이슈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제시했다.

③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중견국 분류의 기준은 각국의 물질적 능력과 같은 경성권력에 기초한다.

④ 쿠퍼(Cooper)는 중견국은 다자적 해법의 모색, 타협적인 자세의 견지, 국제시민의식을 포용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견국(middle power)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시각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중견국 분류는 크게 물질적 능력(인구·경제력·군사력 등 경성권력)을 기준으로 삼는 지위론적 접근과, 외교 행태(다자주의·중재·연합형성 등)를 기준으로 삼는 행태론적 접근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이 두 접근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시각에 각각 잘못 짝지은 선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핵심 개념

지위론적(계량적) 접근=국력의 물질적 크기(인구, GDP, 군사력 등 경성권력)를 기준으로 중견국을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현실주의 시각과 연결된다. 행태론적 접근=국가가 실제로 보이는 외교 행태(다자적 해법 모색, 중재자 역할, 타협적 자세, 국제시민의식)를 기준으로 중견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자유주의(또는 구성주의적) 시각과 연결된다. 오건스키(Organski)는 세력전이론의 맥락에서 중견국을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이슈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제시했고, 쿠퍼(Cooper)는 중견국 외교의 특징으로 다자주의 선호, 타협적 자세, 국제시민의식 포용을 제시했다.

선지별 해설

① 자유주의 시각은 인구,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능력을 기준으로 중견국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한 물질적 능력에 기초한 지위론적 분류는 현실주의 시각의 특징이며(③ 참고), 자유주의 시각은 오히려 다자주의·중재·타협 같은 외교 행태를 기준으로 중견국을 규정한다. 따라서 ①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기준을 뒤바꾼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② 오건스키가 중견국을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이슈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③ 현실주의 시각에서 중견국 분류의 기준을 각국의 물질적 능력, 즉 경성권력에 두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④ 쿠퍼가 중견국의 특징으로 다자적 해법의 모색, 타협적 자세, 국제시민의식 포용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①과 ③에 있다. ③이 '현실주의=물질적 능력·경성권력 기준'이라고 정확히 서술해 두었기 때문에, 인구·경제력·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지표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분류 기준임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은 이 물질적 기준을 자유주의 시각에 붙여 놓아 두 시각의 기준을 뒤바꾼 오류이다. 자유주의 시각의 중견국 기준은 물질적 능력이 아니라 다자주의·중재·타협 같은 외교 행태(쿠퍼가 제시한 특징들)에 가깝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견국 관련 선지가 나오면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가(물질적 능력 vs 외교 행태)'와 '어느 시각에 귀속되는가(현실주의 vs 자유주의)'를 짝지어 확인한다. 물질적 능력·경성권력·국력 서열은 현실주의, 다자주의·중재·타협·국제시민의식 같은 행태적 특징은 자유주의(또는 구성주의)와 연결된다는 대응관계를 기준으로 선지의 짝짓기 오류를 찾아낸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물질적 능력·경성권력 기준의 지위론적 분류, 자유주의=다자주의·중재·타협 등 외교 행태 기준의 행태론적 분류. 오건스키=지역적 역할과 국제이슈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중견국 제시. 쿠퍼=다자적 해법 모색, 타협적 자세, 국제시민의식 포용을 중견국 외교의 특징으로 제시.

NoteBase

문 9.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와 구조주의 시각에서만 국제경제질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두 국가가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룰 때 국제경제질서 또한 안정성을 유지한다.

③ 19세기 중반의 유럽경제는 영국의 패권으로 인하여 안정을 유지하였다.

④ 제2차 세계대전 후 패권의 부재는 20세기 중반 폐쇄적 경제질서의 대두로 이어졌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패권안정론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이 힘의 균형이 아니라 압도적 힘을 가진 하나의 패권국의 존재와 그 패권국의 리더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이론이 실제 역사적 사례(19세기 영국 패권, 전간기 패권 부재, 전후 미국 패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개념

패권안정론=현실주의 계열 이론으로, 국제경제(자유무역·통화질서 등)의 개방과 안정은 압도적인 경제·군사력을 가진 단일 패권국이 질서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규칙을 강제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세력균형(두 강대국이 팽팽히 맞서는 상태)은 오히려 누구도 질서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불안정을 낳는다고 설명한다.
대표 사례는 19세기 중반 영국 패권 하의 자유무역질서(Pax Britannica)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 하의 브레턴우즈 체제(Pax Americana)이며, 반대로 패권이 부재했던 양차대전 사이 시기(전간기)는 보호무역과 경제블록화 등 폐쇄적 경제질서로 귀결된 사례로 제시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패권안정론은 신자유주의나 구조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전통에서 발전한 이론이며, 국제경제질서를 힘의 분포(패권의 유무)로 설명한다. 신자유주의·구조주의 시각에서만 설명한다는 서술은 이론의 성격 자체를 잘못 규정한 것이다.
② X: 패권안정론의 핵심은 세력균형이 아니라 패권의 존재가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두 국가가 팽팽히 맞서는 세력균형 상태는 이 이론에서 오히려 질서 유지 주체의 부재로 불안정을 낳는 상황으로 설명되므로, 세력균형이 안정을 유지시킨다는 서술은 이론의 논리와 반대된다.
③ O: 19세기 중반 유럽은 영국이 압도적인 산업력·해군력·금융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질서(금본위제, 자유무역협정 확산 등)를 주도하며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을 이끈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는 패권안정론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형적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는 시기이다.
④ X: 패권의 부재로 인한 폐쇄적·불안정한 경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전간기, 1920~30년대)의 사례로 설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여 브레턴우즈 체제 등 개방적 경제질서를 주도하였으므로, 시기와 인과관계가 뒤바뀐 서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이론의 계보(현실주의 vs 신자유주의·구조주의)를 혼동한 오답이고, ②는 패권안정론의 핵심 인과관계(패권 유무가 안정을 좌우함)를 세력균형론과 뒤바꾼 오답이다. ④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패권 부재로 인한 불안정'의 역사적 사례 시점을 전간기가 아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잘못 옮겨놓은 함정이므로, 사건과 시기를 짝지어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패권안정론 문제는 먼저 '패권의 존재=안정, 패권의 부재=불안정'이라는 기본 공식을 세운 뒤, 선지에 등장하는 시기(19세기 중반, 전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사례(영국 패권, 전간기 혼란, 미국 패권)를 이 공식에 맞춰 하나씩 대조한다. 세력균형·다극체제를 안정의 원인으로 서술하는 선지는 패권안정론과 반대되는 논리이므로 즉시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패권안정론=현실주의 계열, 안정의 조건=패권국(단일 강대국)의 존재. 19세기 중반=영국 패권으로 안정(Pax Britannica). 전간기(1·2차 세계대전 사이)=패권 부재로 불안정·폐쇄적 경제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미국 패권으로 개방적 경제질서(브레턴우즈 체제) 유지.

NoteBase

문 10. 1842년 「난징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나라는 승전국 영국에 홍콩을 영구 할양하였다.

② 「난징조약」으로 청나라는 양쯔강 이남의 다섯 항구인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를 개항하였다.

③ 영국 상인들은 「난징조약」에 명시된 개항장을 통해 면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④ 「난징조약」 이후 취약해진 청나라는 미국, 프랑스와도 각각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1842년 난징조약의 구체적 내용(할양·개항·후속 조약)과 그 실제 경제적 효과를 구분해서 아는지를 묻는다. 조약문에 명시된 사실과 그 조약이 영국 측에 가져온 실제 결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난징조약은 아편전쟁(1840~1842) 종전 조약으로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체결된 근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 주요 내용은 홍콩섬의 영구 할양, 광저우·샤먼·푸저우·닝보·상하이 5개 항구의 개항, 배상금 지불, 공행(公行) 무역 독점 폐지 등이다. 다만 영국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개항 이후에도 영국산 면직물에 대한 중국 내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고, 영국 본국의 면 산업 생산과잉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아편 밀무역이 대중국 무역의 중심으로 남아 있었고, 영국은 이후 애로호 사건을 빌미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추가 개항과 이권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

선지별 해설

① 청나라는 승전국 영국에 홍콩을 영구 할양하였다. → O. 난징조약 제3조에 따라 홍콩섬이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다.

② 난징조약으로 청나라는 양쯔강 이남의 다섯 항구인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를 개항하였다. → O. 이른바 5개 조약항(개항장)이 정확히 열거되어 있으며 실제 개항 내용과 일치한다.

③ 영국 상인들은 난징조약에 명시된 개항장을 통해 면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 X. 개항 이후에도 중국인의 소비 습관과 자급적 농촌 경제 구조 때문에 영국산 면직물의 판매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영국 본국의 면 산업 생산과잉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고, 무역 역조는 계속 아편 밀무역으로 메워졌다. 개항장 확보가 곧 영국 상인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졌다는 서술은 실제 역사와 어긋난다.

④ 난징조약 이후 취약해진 청나라는 미국, 프랑스와도 각각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 O. 청나라는 이어 미국과 왕샤조약, 프랑스와 황푸조약을 각각 체결하여 최혜국 대우 등 유사한 불평등 조항을 확대 적용받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난징조약의 '조약 내용'과 그 조약이 실제로 가져온 '경제적 결과'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개항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영국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이익이 극대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지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①②④는 조약 문언 및 후속 조약 체결 사실 자체를 묻는 것이라 조약 원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지만, ③은 조약 체결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어 사실과 반대되는 서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소하였다'처럼 조약 체결의 성과나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 조약이 실제로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별도로 따져 본다. 난징조약 이후에도 영국의 대중국 무역 역조와 아편 밀무역 지속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면 이런 함정 선지를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난징조약(1842)=홍콩섬 영구 할양+5개 항구(상하이·닝보·푸저우·샤먼·광저우) 개항+공행 무역 독점 폐지. 개항 이후에도 영국 면직물 수요는 기대에 못 미쳐 생산과잉 문제는 그대로 남았고, 무역 부족분은 아편으로 메워졌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1.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강조된 중요원칙을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나) 화평굴기(和平崛起)
(다) 평화공존5원칙
(라) 도광양회(韜光養晦)

① (나) - (가) - (라) - (다)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가) - (라) - (나)
④ (다) - (라) - (나) - (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국 대외정책의 시기별 핵심 원칙·구호 네 가지를 등장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각 구호가 어느 지도부 시기에 제시되었는지를 알아야 순서를 맞출 수 있다.

올바른 순서

(다) 평화공존5원칙 → (라) 도광양회 → (나) 화평굴기 → (가) 신형대국관계 순서이다.
평화공존5원칙은 1950년대 중반 저우언라이 시기에 제시된 원칙으로, 영토주권 존중·상호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호혜·평화공존을 내용으로 한다.
도광양회는 덩샤오핑 시기에 등장한 대외전략으로, 능력을 감추고 힘을 기르며 대외적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화평굴기는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 제시된 개념으로,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과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신형대국관계는 시진핑 집권 이후 제시된 개념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나)-(가)-(라)-(다): 화평굴기를 가장 앞에, 평화공존5원칙을 가장 뒤에 배치하여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X
② (나)-(다)-(라)-(가): 화평굴기가 평화공존5원칙보다 앞에 놓여 시기 순서가 틀렸다. X
③ (다)-(가)-(라)-(나): 평화공존5원칙을 먼저 두었으나 이후 신형대국관계, 도광양회, 화평굴기 순으로 배열하여 뒤의 세 개념의 순서가 뒤섞여 있다. X
④ (다)-(라)-(나)-(가): 평화공존5원칙(1950년대) - 도광양회(1980~90년대) - 화평굴기(2000년대 초) - 신형대국관계(2010년대) 순으로 시기가 이른 것부터 정확히 나열되어 있다. O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각 구호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지도부 시기에 제시되었는지를 함께 알아야 풀 수 있다. 도광양회와 화평굴기를 혼동하여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도광양회가 덩샤오핑 시기로 더 이르고 화평굴기는 그보다 뒤인 후진타오 시기임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외교 구호가 나오면 먼저 어느 지도자와 연결되는지를 떠올린다. 저우언라이-평화공존5원칙, 덩샤오핑-도광양회, 장쩌민 이후~후진타오 초기-화평굴기(화평발전), 시진핑-신형대국관계 순으로 지도부 계승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면 시기 순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평화공존5원칙(저우언라이, 1950년대) - 도광양회(덩샤오핑) - 화평굴기(후진타오 초기) - 신형대국관계(시진핑) 순으로 지도부 흐름과 함께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12.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③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기본 지식을 묻는다. 특히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수,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 거부권(비토권)의 행사 범위와 관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실질사항(절차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성립하며, 이때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 결정은 성립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른바 거부권이다. 다만 상임이사국이 기권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권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특히 헌장 제7장에 따른 조치 결정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권고적 효력만 갖는 총회의 결의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정확히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권고에 그치는 총회의 결의와 다른 점이다.
③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운영에서 확립된 관례로, 상임이사국이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하면 해당 안건의 표결 성립을 막지 않는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제로는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성립한다. '10개국 이상'이 아니라 '9개국 이상'이 정확한 정족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 결정의 구속력, 기권과 거부권의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이어서 정답이 될 수 없다. 오직 ④만 정족수 숫자를 9개국에서 10개국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어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상임이사국 수(5)와 정족수(9)를 혼동하거나 비상임이사국 수(10)와 정족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문제는 숫자가 핵심 함정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사국 총수 15, 상임이사국 5, 비상임이사국 10, 실질사항 의결 정족수 9(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투표 포함)를 각각 분리해서 암기하고, 지문에 제시된 숫자가 이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아울러 기권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는 관례와,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의 구속력이라는 성격도 함께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상임 5 + 비상임 10), 실질사항 의결정족수는 상임이사국 동의투표 포함 9개국 이상,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 행사로 보지 않음,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은 구속력을 지님.

NoteBase

문 13.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자국을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군대보유와 전쟁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③ 일본은 1970년대에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자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했다.

④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와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역사적 전개를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제9조의 원래 취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차이, 1970년대 정부 견해와 2014년 해석 변경의 시점 차이, 미국의 입장을 각각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핵심 개념

개별적 자위권=자국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스스로 반격하는 권리. 집단적 자위권=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함께 반격하는 권리. 평화헌법 제9조=1946년 공포(1947년 시행)된 일본국 헌법의 조항으로 전쟁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독자적으로 반격'하는 권리가 아니라,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이다. 제시된 설명은 개별적 자위권의 정의에 해당한다.
② O — 1946년 공포된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이나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군대보유와 전쟁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X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한 것은 1970년대가 아니라 2014년 아베 내각의 헌법해석 변경(각의 결정)을 통해서이다. 오히려 1970년대(1972년 정부 견해)에는 일본이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되 헌법상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④ X —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지지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정의를 뒤바꿔 놓은 함정이며, ③은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을 1970년대로 앞당겨 놓은 함정, ④는 미국의 실제 입장(지지)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연도와 주체의 태도를 뒤바꾸는 방식의 오답에 유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안보정책 문제는 '무엇을(개별적/집단적 자위권 정의)', '언제(1946년 제정, 1970년대 견해, 2014년 해석 변경)', '누가 어떤 태도였는지(미국의 지지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대조하면 함정 선지를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평화헌법 제9조=1946년 공포, 전쟁포기·전력불보유·교전권부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공식화=2014년(1970년대는 보유하나 행사불가 입장). 미국(오바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가 아니라 지지.

NoteBase

문 14.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이건 독트린은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소련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②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서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면 아시아 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도입하여 중국봉쇄정책을 추구하였다.

④ 9.11 테러 발생 이후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냉전기부터 탈냉전 이후까지 미국 대통령별 외교정책 독트린과 그 핵심 내용을 정확히 매칭하는지 묻는다. 특히 유사한 명칭의 정책(아시아로의 회귀)을 어느 행정부가 실제로 추진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레이건 독트린(1980년대)=반공 진영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으로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소련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정책으로, 소련 붕괴를 촉진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닉슨 독트린(1969년, 괌 독트린)=베트남전 이후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면서, 핵무기에 의한 위협에는 미국이 대응하되 그 외의 안보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이후 재균형·Rebalance to Asia로도 불림)=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무렵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중동·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승하지 않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이라는 별도의 명칭과 접근으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개입=2001년 9.11 테러 직후 테러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를 비호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실제로 탈레반 정권 붕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레이건 독트린 하의 군비경쟁 확대는 소련 경제에 부담을 주어 소련 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 닉슨 독트린은 핵 위협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안보를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X —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아시아 정책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별개의 틀로 추진되었으므로, 이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도입 주체를 '오바마 행정부'로 바로잡아야 한다.
④ O —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단행한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①, ②, ④를 정답으로 고르는 오류는 각 정책의 시기와 내용이 대체로 잘 알려져 있어 발생하기 어렵지만, ③은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표현이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종종 언론에서 혼용되어 언급되면서 두 행정부의 정책을 혼동하기 쉽다. 정책의 '명칭'이 아니라 그 정책을 실제로 처음 도입하고 주도한 '행정부'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국 외교정책 관련 문항에서는 정책 명칭과 행정부를 1:1로 짝짓는 표를 머릿속에 그려 놓고, 선지에 등장하는 행정부명과 정책명이 실제로 같은 시기에 등장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특히 '아시아로의 회귀/재균형'은 오바마,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로 구분해서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레이건 독트린=반공 지원→소련 붕괴 촉진. 닉슨 독트린=핵 위협 제외, 아시아 자체 방위. 아시아로의 회귀(재균형)=오바마. 인도·태평양 전략=트럼프. 부시=9.11 이후 아프가니스탄 개입·탈레반 축출.

NoteBase

문 15.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이래 유럽동맹체제의 경직화가 주요한 개전 요인의 하나였다.

②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민족문제가 주요한 개전 요인의 하나였다.

③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윌슨의 이상주의에 의해 국제연맹이 수립되었다.

④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오스만제국이 해체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배경과 전후 처리 과정에 관한 기본 사실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특히 전후 영토·제국 처리는 조약별로 대상이 다르므로 어느 조약이 어느 제국·지역을 처리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제1차 세계대전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19세기 후반 이후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으로 굳어진 유럽 동맹체제의 경직화,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다민족 제국 내부의 민족문제가 꼽힌다. 종전 후에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이상주의적 구상(14개조 원칙)에 따라 국제연맹이라는 최초의 상설 국제기구가 수립되었다. 다만 전후 처리 조약은 대상국별로 별도로 체결되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오스트리아는 생제르맹 조약, 헝가리는 트리아농 조약, 불가리아는 뇌이 조약, 그리고 오스만제국은 세브르 조약(이후 로잔 조약으로 개정)의 적용을 받았다. 즉 오스만제국의 해체는 베르사유 조약이 아니라 세브르 조약 계열에 의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19세기 후반 이래 삼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과 삼국협상(영국·프랑스·러시아)으로 양분된 유럽 동맹체제가 경직화되면서 국지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구조적 개전 요인으로 꼽힌다.
② O.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여러 민족을 포괄한 다민족 제국이었는데, 발칸 반도의 범슬라브주의·민족주의 확산과 내부 민족문제가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③ O.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이상주의적 원칙(14개조 원칙)에 기반하여 국제연맹이라는 최초의 보편적 상설 국제기구가 수립되었다.
④ X. 오스만제국을 해체·처리한 조약은 베르사유 조약이 아니라 세브르 조약(이후 로잔 조약으로 개정)이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오스만제국과는 무관하다. 틀린 표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오스만제국이 해체되었다' → 올바른 표현 '세브르 조약(로잔 조약)에 의해서 오스만제국이 해체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조약을 모두 '베르사유 조약'으로 뭉뚱그려 암기하면 이 문제에서 바로 걸린다. 전승국은 패전국별로 별도의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리고 오스만제국은 베르사유가 아니라 세브르(로잔) 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베르사유 조약'이 등장하면 그 대상이 독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한다.
오스만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불가리아가 함께 언급되면 각각 세브르(로잔)·생제르맹·트리아농·뇌이 조약으로 대응시켜 오답을 가려낸다.

암기 포인트

독일=베르사유, 오스트리아=생제르맹, 헝가리=트리아농, 불가리아=뇌이, 오스만제국=세브르(→로잔)로 패전국과 조약명을 1대1로 짝지어 암기한다.

NoteBase

문 16. EU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② EU는 「유럽헌법조약」에 따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③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④ EU와 NATO의 동진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EU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형성 배경과 제도 변화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이라는 두 직위를 어느 조약이 만들어 냈는지가 핵심이며, 이 문제는 발효되지 못한 「유럽헌법조약」과 실제로 발효되어 이 직위들을 신설한 리스본 조약을 혼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핵심 개념

「유럽헌법조약」(유럽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는 조약)은 2004년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했으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끝내 발효되지 못했다. 이후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계승한 리스본 조약이 2007년 서명, 2009년 발효되면서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실제로 신설하였다. 즉 두 직위의 법적 근거는 유럽헌법조약이 아니라 리스본 조약이다. 한편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은 초국가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부 간 협의 방식을 따르며, 정책 결정은 원칙적으로 회원국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또한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유럽이 독자적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절감한 계기로, CFSP 강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지별 해설

① O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EU는 독자적으로 분쟁을 관리하지 못하고 미국과 NATO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경험이 EU 차원의 공동외교안보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② X —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은 「유럽헌법조약」이 아니라 리스본 조약에 의해 신설되었다. 유럽헌법조약은 국민투표 부결로 발효되지 못했으므로 이 조약을 근거로 직위가 신설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O — CFSP는 회원국 정부 간 협력(정부 간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제를 따른다. 이는 EU의 다른 정책 영역(예: 역내시장 관련 사안의 가중다수결)과 구분되는 CFSP의 특징이다.
④ O — 냉전 종식 이후 EU와 NATO가 중·동유럽으로 확대(동진)되면서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 왔고, 이는 실제로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 조약」의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져 혼동하기 쉬운데, 유럽헌법조약은 회원국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실제로는 발효된 적이 없는 조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유럽대외관계청 설치 등 EU 제도 개편을 이끌어 낸 것은 리스본 조약이다. 조약의 이름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지 말고, '실제로 발효되어 제도를 만든 조약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U 관련 지문에서 특정 직위나 기구의 신설 근거로 조약 이름이 제시되면, 그 조약이 실제로 발효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유럽헌법조약처럼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부결·미발효로 끝난 조약을 제도 신설의 근거로 제시하는 선지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CFSP의 정부 간 성격, 만장일치 요건, 유고 내전을 계기로 한 필요성 강화, EU·NATO 동진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처럼 통설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서술한 선지는 옳은 설명으로 보아도 된다.

암기 포인트

유럽헌법조약(2004 서명·2005 국민투표 부결·미발효) vs 리스본 조약(2007 서명·2009 발효,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CFSP는 정부 간 협력 방식이며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1990년대 유고 내전은 EU 공동외교안보정책 필요성을 강화시킨 계기다. EU·NATO 동진은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이다.

NoteBase

문 17.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②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 국가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③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④ 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개념의 성립 배경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R2P는 국가주권을 인권 보호의 면책 사유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규범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태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보호책임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체계화되었고,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핵심 구조는 세 가지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反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둘째, 국제사회는 각국이 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책임을 진다. 셋째, 해당 국가가 명백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국제사회가 외교적·인도적 수단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단적 조치까지 포함하여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다만 R2P가 적용되는 사태는 위 네 가지 범죄, 즉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도범죄에 한정되며,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 자체는 R2P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옳다. 보호책임 개념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가 작성한 보고서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② 옳다. 보호책임의 첫 번째 축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해당 국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의미로 제시된 내용이다.
③ 옳지 않다. 보호책임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라는 네 가지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에 적용되도록 설계된 개념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 올바른 표현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도범죄와 같은 중대 인권 침해 사태에 적용한다'.
④ 옳다.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방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보호책임의 세 번째 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호책임을 '인도적 위기 전반에 대한 개입 근거'로 넓게 이해하면 자연재해도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R2P는 국가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방기에 의한 것이든 결국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도범죄라는 인위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를 전제로 성립한 개념이며, 자연재해 대응은 별개의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체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위기' 등 인위적 중대범죄가 아닌 사태가 R2P의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면 우선 의심한다. R2P의 적용 대상은 항상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도범죄 네 가지로 한정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암기 포인트

R2P 3대 책임: 국가의 일차적 보호책임 → 국제사회의 지원·역량강화 책임 →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의 대체적 보호책임. 적용 대상 4대 범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 성립 근거: 2001년 ICISS 보고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 채택.

NoteBase

문 18.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

② 합의서 발효 후 6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③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를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④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정답 1번

쟁점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제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선지들은 합의서 서문과 각 조항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변형해 두었으므로, 특히 기간(3개월 vs 6개월)·분쟁 해결 방식(대화와 협상 vs 유엔헌장)·국제무대 태도(대결과 경쟁 중지 vs 선의의 경쟁)를 원문과 대조해 가려야 한다.

용어 풀이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2월 발효된 합의서로,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문서이다. 화해(제1장)·불가침(제2장)·교류협력(제3장)의 3장 체계로 구성된다.

핵심 구분

서문에서 재확인한 원칙 =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 연락사무소 설치 기한 = 발효 후 3개월(6개월 아님) / 분쟁 해결 방식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유엔헌장 아님) / 국제무대에서의 태도 = 대결과 경쟁의 중지 및 협력(선의의 경쟁 아님).

선지별 해설

① O —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라는 문구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 옳다.
② X — '발효 후 6개월 안에' → '발효 후 3개월 안에'. 합의서는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한다.
③ X — '「유엔헌장」에 따라' →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합의서는 남과 북이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며, 유엔헌장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④ X —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한다'. 합의서는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한다. '선의의 경쟁'은 오히려 대결·경쟁 중지 취지와 반대되는 표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3개월'이라는 숫자만 '6개월'로 바꿔 놓아 무심코 읽으면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③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결론 부분이 맞아 보이지만 그 방법을 '유엔헌장'으로 바꾼 함정이다. ④는 '서로 협력하고'까지는 맞지만 '선의의 경쟁'이 합의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 정신과 정반대라는 점을 놓치면 걸린다. 세 선지 모두 원문의 핵심 어구 하나만 교체한 변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남북기본합의서 문항은 서문의 '7·4 공동성명 3대 원칙 재확인'과 조항별 핵심 어구를 숫자·방식 위주로 확인한다. 특히 '연락사무소 3개월', '분쟁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국제무대 대결·경쟁 중지'라는 세 축을 기억해 두면, 이 축을 변형한 선지를 바로 오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남북기본합의서(1991 채택·1992 발효): 서문=7·4 남북공동성명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재확인, 연락사무소=발효 후 3개월 내 판문점 설치, 분쟁 해결=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국제무대=대결과 경쟁 중지 후 협력. 관계 성격='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

NoteBase

문 19.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러시아-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②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인 구단선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③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④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영토분쟁 사례(러-일 쿠릴열도, 남중국해 구단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카슈미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남중국해 구단선 문제를 누가, 어떤 기구를 통해 판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핵심 개념

남중국해 구단선(九段線)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그은 경계선이다. 이 구단선의 국제법적 근거를 부정한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상설중재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사건을 심리)이다.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판정에서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한 바 없으며, 애초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4개도서) 반환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접촉을 이어왔으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② X. 남중국해 구단선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주체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상설중재재판소이다.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 발표했다"는 표현은 "상설중재재판소가 … 판정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대만이 이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④ O.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남중국해 구단선 판정 주체를 혼동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구로서 영토·해양 권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은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중재재판소 같은 재판·중재 기구가 담당한다는 점을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토분쟁 관련 지문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판정/발표하였다"는 식의 서술이 나오면 우선 의심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제재 등 정치적 조치를 다루는 기관이고, 영유권이나 해양경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국제사법재판소·상설중재재판소 등 사법·준사법 기구의 몫이라는 구도로 접근하면 함정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남중국해 구단선 국제법 근거 부정 판정=상설중재재판소(2016, 필리핀 대 중국 사건), UN 안전보장이사회 아님.
쿠릴열도/북방4개도서=러-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일-중, 카슈미르=인도-파키스탄으로 분쟁 당사국 짝을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20. 21세기 식량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량안보의 핵심은 공급의 안정성과 식품의 안전성이 포함된 획득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다.

② 식량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계적 분배문제가 아니라 식량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곡물 수요증가의 배경에는 사료용 곡물 수요증가, 인구증가,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등이 있다.

④ 식량 공급의 부족 원인은 유가와 비료비 인상, 농업 투자 감소, 비식용 농작물 생산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21세기 식량안보 논의에서 식량위기의 발생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식량안보 담론에서는 절대적 공급 부족보다 분배(접근성)의 문제가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강조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핵심 개념

식량안보는 단순히 식량이 세계적으로 충분히 생산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식량에 실제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해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식량안보 개념은 획득 가능성(availability), 접근 가능성(access), 이용 가능성(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 21세기 식량위기 논의에서는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이 인구가 필요로 하는 양에 크게 못 미치기보다, 소득·가격·유통구조에 따른 분배 불균형이 특정 지역·계층의 식량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즉 식량위기는 '얼마나 생산되는가'보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로 공급의 안정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포함한 획득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용 가능성을 드는 것은 식량안보 개념의 표준적 구성과 일치한다.
② X → 식량위기의 발생 원인은 식량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서라기보다,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량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분배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 21세기 식량안보 논의의 통설이다. 지문은 원인 설명을 정반대로 뒤집어 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
③ O — 곡물 수요증가의 배경으로 가축 사료용 곡물 수요증가, 세계 인구증가,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를 드는 것은 21세기 식량위기 논의에서 널리 인정되는 수요측 요인이다.
④ O — 식량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유가·비료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농업 투자 감소, 비식용 농작물(바이오연료 원료 등) 생산 확대에 따른 식용 곡물 재배면적 축소,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를 드는 것은 공급측 요인 설명으로 타당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분배문제'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감(절대적 부족)'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오답을 구성한다. 세계 식량 생산량 자체는 이론상 전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통설이므로, 위기의 원인을 절대적 공급 부족으로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의 세부 요인(③·④)은 서로 다른 층위(수요측·공급측)의 요인 나열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량안보 관련 문항에서 '식량위기의 원인'을 묻는다면, 절대적 생산량 부족보다 분배·접근성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선지가 통설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한다. 반대로 원인을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는 옳지 않은 설명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식량안보 4요소: 획득 가능성·접근 가능성·이용 가능성·안정성. 21세기 식량위기의 핵심 원인은 절대적 공급 부족이 아니라 분배 문제. 수요측 요인: 사료용 곡물 수요증가, 인구증가, 바이오 에너지화. 공급측 요인: 유가·비료비 인상, 농업 투자 감소, 비식용 농작물 생산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NoteBase

문 2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②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기초하였다.

③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④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 개입은 배제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브레턴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이 질서는 19세기식 순수 자유방임 자유주의가 아니라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핵심 개념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주도 아래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등을 통해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되, 각국 정부가 완전고용과 사회복지 등 국내적 안정을 위해 자본 통제나 재정·통화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인정한 절충적 질서였다. 이를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 또는 '내장된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또한 이 질서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과 안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미국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 O. 브레턴우즈 체제의 설계와 운영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주도권 아래 이루어졌다.
②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기초하였다. → O. 순수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 여지를 인정하는 절충적 자유주의였다.
③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 O. 냉전 구도 속에서 서방 진영의 경제적 유대 강화는 안보 전략의 일부였다.
④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 개입은 배제되었다. → X. 실제로는 정반대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통제(자본 통제)를 허용하였고, 완전고용·사회복지 등 국내적 필요에 따른 국가 개입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의 실질적 내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브레턴우즈 체제의 실제 성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어서 정답에서 제외된다. ④는 얼핏 자유주의 질서의 '자유' 측면만 강조한 것처럼 보여 옳은 진술로 착각하기 쉽지만, 자본 이동 통제 허용과 국내 개입 인정이라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절충적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옳지 않은 진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후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문제는 '자유주의=완전한 자유방임'이라는 단순 도식으로 접근하면 함정에 빠진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도 자본 통제와 국내 정책 자율성을 동시에 인정한 절충 질서였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고, 선지 중 '어떤 개입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식의 절대적 진술이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을 우선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브레턴우즈 체제 = 미국 주도 +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 자본 통제·국내 개입 인정 + 냉전기 서방 진영 결속의 안보적 기능.

NoteBase

문 22.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ATT는 비차별, 투명성,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였다.

② GATT 체제하에서 제네바 1차 라운드를 시작으로 딜런, 케네디, 도쿄,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진행되었다.

③ 무역자유화를 통한 국제교역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④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GATT 체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GATT에서 WTO로의 전환 시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어떤 협상이 GATT 체제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협상이 WTO 체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핵심 개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47년 출범 이후 총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을 진행하였다. 순서대로 제네바 1차 라운드, 애너시 라운드, 토키 라운드, 제네바 2차 라운드, 딜런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의 타결 결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고, GATT 체제는 이때 WTO 체제로 대체되었다. 이후 진행된 도하개발어젠다(DDA, 2001년 시작)는 GATT가 아니라 WTO 출범 이후의 WTO 체제하에서 진행된 협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GATT는 비차별 원칙(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투명성 원칙,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었다는 설명은 옳다(O).
② GATT 체제하에서 제네바 1차 라운드를 시작으로 딜런, 케네디, 도쿄,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도하개발어젠다까지 GATT 체제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도하개발어젠다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GATT가 WTO로 대체된 이후, 즉 WTO 체제하에서 시작되고 진행된 협상이므로 GATT 체제의 라운드로 분류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까지 GATT 체제하에서 진행되었다' → 올바른 표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WTO 체제하에서 진행되었다'.
③ 우루과이라운드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로 국제교역이 급격히 성장하였음에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와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설명은 옳다(O).
④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간 협상의 정체와 맞물려 지역무역협정(RTA)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크게 확산된 것은 옳다(O).

NoteBase

오답 포인트

GATT와 WTO를 하나의 연속된 체제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도하개발어젠다도 GATT의 마지막 라운드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동시에 GATT는 WTO로 대체되었고, 이후의 모든 다자간 협상(도하개발어젠다 포함)은 WTO라는 새로운 국제기구 체제하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ATT 체제하에서 ~까지 진행되었다'는 문장에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협상(특히 도하개발어젠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서술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GATT의 8차 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끝나고, 그 이후는 WTO 체제라는 기준으로 시기를 나눠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GATT 8차 라운드 순서: 제네바1차-애너시-토키-제네바2차-딜런-케네디-도쿄-우루과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1994) → WTO 출범(1995) → GATT 체제 종료. 도하개발어젠다(2001~)는 WTO 체제의 협상이다.

NoteBase

문 23. 대량살상무기 통제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25년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는 독가스와 세균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이다.
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체결되고, 1970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ㄷ.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타국으로의 이전을 금지하였으나 기존 비축분은 보유를 허용하였다.
ㄹ. 1965년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국제협정 4가지(제네바의정서, NPT, CWC, BWC)의 체결·발효 시기와 규율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협정별로 '금지 대상 행위'와 '기존 비축분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각 협정의 발효 연도를 서로 뒤섞어 놓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제네바의정서(1925)=독가스·세균 등 화학·생물 무기의 '전시 사용'만 금지(개발·생산·보유는 규율 대상 아님). NPT(1968년 서명, 1970년 발효)=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근간으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이전 금지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획득 금지를 규정한다. CWC(1993년 서명, 1997년 발효)=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이전·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비축분까지 폐기하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BWC(1972년 서명, 1975년 발효)=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최초로 전면 금지한 협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O — 1925년 제네바의정서는 독가스 등 질식성·독성 가스와 세균학적 수단의 전시 사용을 금지하는 의정서로, 설명이 정확하다.
ㄴ. O — NPT는 1968년 체결되어 1970년에 발효되었다는 시기 설명이 정확하다.
ㄷ. X —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1997년 발효되었다는 시기는 맞지만, 화학무기의 '기존 비축분 보유를 허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CWC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무기까지도 일정 기한 내에 전량 폐기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이다.
ㄹ. X —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목적(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은 맞지만, 발효 연도가 틀렸다 → BWC는 1972년 서명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1965년 발효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②·④번은 ㄹ을 옳은 설명으로 보는 오류인데, BWC의 발효 연도(1975년)를 1965년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걸리기 쉽다. ③번은 ㄷ을 옳은 설명으로 보는 오류인데, CWC가 '기존 비축분 보유는 허용'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CWC의 핵심은 오히려 기존 비축분까지 폐기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협정마다 ①발효 연도, ②금지 대상 행위(사용만 금지인지, 개발·생산·비축까지 금지인지), ③기존 비축분 처리 방식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대조하면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제네바의정서는 '사용 금지'만, NPT·CWC·BWC는 '개발·생산·비축까지' 금지 범위가 넓어진다는 흐름과, CWC·BWC는 기존 비축분도 폐기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제네바의정서 1925=사용금지만. NPT 1968 서명/1970 발효. CWC 1993 서명/1997 발효=개발·생산·이전·사용 전면금지+기존 비축분도 폐기. BWC 1972 서명/1975 발효=개발·생산·비축 전면금지(최초의 WMD 전면금지 협약).

NoteBase

문 24.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ㄴ. 세계인권선언에는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 민족자결권 등 집단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ㄷ.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양대 국제인권규약으로 채택되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의 채택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계인권선언이 어떤 역사적 계기로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실제로 어떤 권리들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후 국제인권규약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생명권·자유권·평등권 등 개인을 주체로 한 인권을 천명한 문서이다. 반면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나 민족자결권처럼 집단을 주체로 하는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후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서 공통 제1조로 자결권이 규정되며 발전하였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적 권리 중심의 선언적 문서이고, 두 규약은 그보다 한참 뒤인 1966년에 채택되어 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옳다 →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의 대규모 인권 유린은 국제사회가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였고, 이러한 성찰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ㄴ. 틀렸다 → 세계인권선언은 생명·자유·평등 등 개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나 민족자결권 같은 집단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집단적 권리(특히 자결권)는 이후 1966년 두 국제인권규약의 공통 제1조에서 비로소 명문화되었다.
ㄷ. 틀렸다 → '1950년대'라는 시점이 잘못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양대 국제인권규약)은 1950년대가 아니라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오답 포인트

ㄴ은 세계인권선언의 '개인 중심' 성격을 집단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한 오류이고, ㄷ은 양대 국제인권규약의 채택 시점을 실제(1966년)보다 앞선 1950년대로 잘못 제시한 오류이다. 두 선지 모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뒤섞어 시기와 내용을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이므로, 문서별로 채택 연도와 담긴 권리의 성격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계인권선언 관련 문항에서는 먼저 '언제 만들어졌는가(1948년)'와 '무엇을 다루는가(개인 중심의 인권 선언, 법적 구속력 없음)'를 구분한 뒤, 이후 이를 조약화한 양대 국제인권규약이 '언제(1966년)' 채택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집단적 권리(자결권 등)가 언급되면 이는 세계인권선언이 아니라 국제인권규약 이후의 논의라는 점을 우선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세계인권선언(1948, 개인 중심 선언·구속력 없음) → 양대 국제인권규약(1966,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조약으로서 구속력 있음, 공통 제1조에 자결권 규정)의 순서와 성격 차이를 짝으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5. 국제무역체제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무역협정은?

① 도쿄라운드
② 도하개발어젠다
③ 케네디라운드
④ 우루과이라운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분쟁해결 방식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느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묻는다. GATT 시기의 분쟁해결은 당사국 합의(총의, consensus)에 기반해 패널 설치·보고서 채택이 쉽게 봉쇄될 수 있었던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반대총의제(역총의, negative consensus)를 도입한 분쟁해결기구(DSB)를 두어 법률적 구속력을 갖춘 상설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였다.

핵심 개념

도쿄라운드(1973~1979)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중점을 둔 협상으로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지 않았다. 케네디라운드(1964~1967)는 관세 일괄 인하가 중심이었던 초기 GATT 라운드다. 도하개발어젠다(2001~)는 WTO 출범 이후 시작된 다자협상으로, 개발도상국 문제를 포함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분쟁해결기구를 만든 협상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협상 타결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고, 이때 법률적 구속력과 준자동적 채택 절차(반대총의제)를 갖춘 분쟁해결기구(DSB)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도쿄라운드: X. 비관세장벽 관련 협정(코드) 체결에 중점을 둔 협상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춘 상설 분쟁해결기구를 출범시키지 않았다.
② 도하개발어젠다: X. WTO 출범 이후에 시작된 협상 라운드로, DSB를 새로 만든 협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DSB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협상이다.
③ 케네디라운드: X.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GATT 초기 라운드로, 분쟁해결기구와는 관련이 없다.
④ 우루과이라운드: O. 협상 타결로 WTO가 설립되면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SB)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라운드 명칭만 보고 익숙한 순서(케네디-도쿄-우루과이-도하)로 답을 고르면 안 되고, 각 라운드가 실제로 만들어낸 제도적 결과(관세 인하 vs 비관세장벽 협정 vs WTO·DSB 설립 vs 진행 중인 협상)를 구분해야 한다. 도하개발어젠다를 WTO 자체와 혼동해 답으로 고르는 오류에 특히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 법률적 구속력, 반대총의제(역총의), 상설 분쟁해결기구, WTO 설립 같은 표현이 나오면 우루과이라운드를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관세 인하가 핵심 키워드면 케네디라운드, 비관세장벽이 핵심 키워드면 도쿄라운드, 개발도상국·농업·환경 등 진행형 협상 이슈가 나오면 도하개발어젠다를 떠올린다.

암기 포인트

우루과이라운드 = WTO 설립 + DSB(분쟁해결기구) 출범 + 반대총의제로 정리해 둔다.

NoteBase